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1] 육상운송 분야 표준계약서

육상화물운송 표준계약서

화주기업 OOOO회사(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물류기업 OOOO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화물의 육상운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개개의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과 수급인은 원활한 운송의 수행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에게 운송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개별계약의 성립)

- ①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간 운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체결이후에 성립하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모든 개별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구체적인 운송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도급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이하 “운송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도급인의 기

명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1. 화물 및 포장의 종류, 그 중량, 용적 또는 개수
 2. 특별한 취급방법을 정한 경우 그 취급방법
 3. 위험물의 여부와 취급방법
 4. 출발지 및 화물의 수령방법
 5. 목적지 및 화물의 인도방법
 6. 약정된 운임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7. 작성일자
 8.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수급인의 운송의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운송명세서와 화물을 제공한 이후에 개시된다.

제3조(계약의 변경)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변경의 효력은 발생되며, 변경합의서와 배치되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문서 간 모순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적용 순위는 변경합의서, 본 계약서, 운송명세서, 부속합의서(운송요율표 등) 순이다.

제4조(운송업무)

- ① 수급인은 출발지에서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화물을 수령하는 즉시 화물 및 포장의 종류, 중량·용적 또는 포장의 개수 등이 운송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외관상 하자 유무(컨테이너의 경우 봉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의 내용이 운송명세서와 상이하거나 외관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지체 없이(생동물의 경우 수령 후 1시간 안에,

그 밖의 화물의 경우 수령 후 6시간 안에) 화물을 제공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이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특별한 운송방법을 사전에 합의하여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인은 운송명세서에 기재된 화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송한다.
- ⑥ 수급인은 수급인의 피고용인·운전기사 등 본 계약에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및 본 계약의 제반 의무사항을 교육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종료와 화물의 수령·회수)

- 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수급인이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도급인은 지체 없이 화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화물의 멸실·훼손 및 수량부족을 이유로 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 ② 도급인이 즉시 화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의 비용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화물을 보관한다.
- ③ 수급인에게 화물을 보관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도급인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화물이 운송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제공한 장비·용기 안에 있거나 그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화물을 분리하여 그 장비·용기를 수급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 장비·용기의 사용료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운송의 포기를 통지한 경우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화물을 회수하거나 무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운송의 중단에 대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화물의 회수·무해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손해의 배상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운송의 중단이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화물의 회수·무해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손해를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위험물)

- ① 도급인은 위험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하고, 수급인이 위험물을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종류와 속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불충한 표시나 통지로 인하여 위험물의 포장용기·운송장비·인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위험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전적으로 위험물에 관한 표시·통지의 하자 또는 취급상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화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통지)

- ① 도급인이 화물의 일부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생동물의 경우 수령 후 1시간, 그 밖의 화물의 경우 수령 후 6시간 안에) 그 개요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급인 또는 그 사용인이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④ 화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화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운임의 결정 및 지급)

- ① 운임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운송요율표에 따른다.
- ② 수급인은 매달 말일까지 실적을 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료를 청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운임지급에 갈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제반 증빙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임의 지급 방법)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첫 번째 은행의 영업일에 지급한다.
- ② 도급인이 운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권)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운임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도급인이 운송에 제공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1. 도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도급인이 운임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급인이 본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운송요율의 결정 및 기준)

- ① 운임은 유가,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 차량의 종류, 운송거리를 감안한 운송원가에 노무비 등 적정 관리비를 더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산정방식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후, 운송요율표로 정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 ②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요율의 변경 또는 유류할증액 지급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그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운송요율표 또는 부속합의서에 명시한다.
- ③ 도급인은 운송요율을 적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운송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송요율을 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송요율의 개정 및 중재)

- ① 운송요율에 대해 일정 단위의 적용기간을 정한 때에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운송요율은 자동으로 같은 기간 단위로 갱신된다.
-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계약체결 90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송요율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원재료, 연료 등의 가격변동
 - 2. 운송구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도급인이 위탁하는 업무의 변경
- ③ 운송요율의 개정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요율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운송요율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운송요율 개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중재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판정한 운송요율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
- ⑤ 개정된 운송요율은 제1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종전 운송요율 적용기간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한 날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3조(운임의 감액 금지)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이유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에게 운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로 운임을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송명세서를 교부한 이후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한, 운송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수급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운송의 품질보증)

- ① 수급인은 운송의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도급인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 ③ 수급인은 운송의 변경,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급인은 승인된 운송변경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은 품질관리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에게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 내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당결제 청구 등의 금지)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송을 이유로 자기로부터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도급인은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의 지급기일 이전에 물품의 구매대금 또는 장비 등의 사용대가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자기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급인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도급인은 도급인의 화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부담할 경우 도급인은 이를 수급인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하차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할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보험가입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 ① 수급인은 운송도중 제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운송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고가화물, 특수화물, 위험화물, 부패성 화물 등 화물의 특성상 운송에 따른 보험비용이 추가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책임)

- ① 수급인은 자기 또는 수급인이 운송을 재위탁한 제3자, 그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도급인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운송의 지연 또는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
 - 2. 화물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
- ② 수급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전쟁, 폭동, 내란, 테러, 무력충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4.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5. 재판상의 압류, 화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6.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7. 도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8. 그 밖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정한 수급인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도급인의 직접적·간접적 영업 손실과 기대이익, 제3자의 도급인에 대한 클레임 등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 화물의 도착지 가격,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⑤ 화물이 고가물인 경우에, 도급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수급인에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가의 화물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상한도를 결정한다.
- ⑥ 운송업무 수행 중 수급인의 피용인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 사고 또는 물적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그 사고에 대해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제외), 파산·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흡수합병을 결의한 경우
5.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수급인이 도급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운송을 재위탁한 경우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인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 4항의 품질관리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이 미흡하여 계약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해제·해지시의 처리)

①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자를 선정함에 필요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 수급인에게 운송을 속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제3자를 선정한 경우 수급인은 제3자에게 그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의 차량 도색 또는 차량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시 원상복구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21조(거래정지의 예고)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19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의 손해·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비밀의 유지)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또는 기술에 관한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재위탁)

- ①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제3자와의 거래에 개입하여 제3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되,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또는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

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수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2] 3PL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안)

3PL서비스 계약서

화주기업 OOOO회사(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물류기업 OOOO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물류 서비스’를 위탁하고 수급인이 이를 수탁 처리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합의서’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 상호 합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목적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목적물은 도급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및 제품의 보관용기(이하 '화물'이라 함)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3자 물류 서비스의 범위)

-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제3자 물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급인의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하역
 -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시설 제공 및 관리
 - 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4.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서비스 범위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서비스 요율)

- ① 제4조의 서비스에 대한 제반 요율은 '부속합의서'상의 '요율표'에 의거한다.
- ② 물류컨설팅 비용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정산)

- ① 제5조에 명시된 요율에 의거한 서비스 수수료는 월 단위로 하며, 수급인은 당월 분의 비용을 익월 15일 영업일까지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익월 말 이전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수급인은 화물 인도 시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서명이 날인된 인수증 일체를 수취 및 보관하되,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수증 미회수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 인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인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운송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 인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의무 및 책임)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도급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화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화물을 인수할 때 외관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당시 상호 확인되지 않은 화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외관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수급인은 대상 화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숙련된 기사 및 작업자를 사용하고, 도급인의 주의사항, 출하지 또는 도착지에서 의 각 사업자들이 지시하는 사항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⑤ 수급인은 운송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급인의 사용인 및 기타 제3자의 사망, 상해, 기타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⑥ 수급인은 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적재물 보험 및 대인·대물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불이행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연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도급인의 직접적·간접적 영업 손실과 기대이익, 제3자의 도급인에 대한 클레임 등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 화물의 도착지 가격,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⑤ 화물의 운송이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적용한다.
- ⑥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피해 화물의 재포장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도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승인 하에 운송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⑧ 파손 화물 중 사용 가능한 것은 도급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⑨ 수급인은 운송도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단,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 ⑦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도급인의 추가 비용 및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9조(면책사항)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수급인이 화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2. 전쟁, 폭동, 내란, 테러, 무력충돌
 -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 4.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5. 재판상의 압류, 화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6.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7. 도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8. 그 밖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정한 수급인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 및 제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본 계약에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금지)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상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며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양도 이전에 본 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양도 후에 발생하는 수급인의 일체의 채무는 수급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 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기존 계약 및 부속합의서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수급인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도급인은 필요 시 물류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행 기준을 수급인에게 제시하고, 수급인은 동 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수행
2. 도급인은 수급인의 물류서비스 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수급인의 서비스 기준에 대한 수행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

제14조(계약의 해제 · 해지)

-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도,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 합병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최초 계약 이후, 서비스 범위 및 구간을 확대 시행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단, 3호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를 해지한다.

4. 수급인의 대상 업무에 대한 수행기준 평가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대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제1항 및 2항 각 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가 해제권자·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도급인과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투입하는 투자비용은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시점까지 각 당사자의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및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부속합의서)

① 계약서 본문 외에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본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 사이의 추가적인 약정은 부속합의서에 명시한다.

②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 간 협의 하에 '부속합의서' 내용을 수정, 변경 및 보완 할 수 있다.

제16조(관할 및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수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